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최근 중국의 한국사 연구를 보면 고구려사 연구가 다양화되고 심화되었다. 고조선·부여·가야·백제·신라·고려·조선 연구가 급증했다.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중관계를 모두 종번관계(宗藩關係)로 정리하고 있다. 만주지역 고대 민족과 왕조사를 총정리하는 대형 출판사업이 진행되었다.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경향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사 연구심화, 신진연구자 양성, 국내외 교육과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사의 출발점과 시·공간 범위와 흐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사대계 편찬, 역사이론 개발, 북방사 정리가 필요하다. 역사화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역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중·일·공통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한·중 공동 역사서와 역사교재 제작, 공동역사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1. 중국 국가박물관 연표 편집사건이 소환한 동북공정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금년 7월 26일부터 열고 있는 <동방길금(東方吉金)-한·중·일 고대 청동기유물전>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한국사 연표가 패널로 게시된 사실이 9월 13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표 아래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고 적혀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제공한 연표를 중국측이 마음대로 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국가박물관에 시정하지 않으면 전시유물을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였고, 결국 연표를 철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무진간의 소통 과정에서 파생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앙박물관에서는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 698년 발해 건국으로 표기한 연표를 제공했는데, 중국국가박물관에서 고조선 존속기간을 ‘? ~ 108B.C’로 고치고 고구려와 발해는 연표에서 아예 삭제했다. 이것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고 보지 않는다. 물음표를 적어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조선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에 건국하여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漢武帝)에 의해 멸망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고조선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말한다. 고조선 건국시기에 대한 내용 편집이 중국학계의 학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만큼 고구려와 발해를 연표에서 삭제한 것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다.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관계 정상화 50주년을 기려 한중일 삼국이 개최하는 특별전에서 공동 주최국에서 제공한 연표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게시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중국국가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배경이무엇일까? 여기에서 해묵은 이름이 다시 떠오른다. 바로 동북공정이란 이름이다.

2022년은 중국에서 진행된 이른바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¹⁾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에서 합작하여, 2002년

1) 이 글은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며 요약했다.

2월부터 5년간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긴 이름인데,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부른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민족, 강역, 변경문제 등 이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동북공정은 한중 역사학계 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만주지역 연구는 동북공정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역사,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한중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모두 동북공정이 거론된다. 동북공정이 여전히 한중간 경제·문화교류, 정치적 우호협력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9년에 지린성 창춘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발표내용을 출간하는 것으로 동북공정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국중심적 사관에 입각한 한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북공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 동북공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동북공정 이후 동북3성 지역의 역사연구 동향

한중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사정책과 관련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 역사정책을 더 중시하면서 애국주의에 바탕한 자민족중심주의가 더 강화되었다. 중국이 역사와 문화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국가였음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작업과 그것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일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2014년 10월 중국변강연구소로 승격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6개 연구소를 합친 중국역사연구원이 출범했다. 동북3성의 역사연구 사업은 지역 사회과학원과 대학, 연구기관에서 주도하지만 학술회의나 연구사업에 중국변강연구소 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중앙의 방향제시와 지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비도 동북3성 사회과학원의 재원 외에 국가사회과학기금, 교육부기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최근 한국사 연구동향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나온 연구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구려사 연구가 수적으로 줄어든 대신 주제별로 심화되고 있다. 고구려사 신진연구자가 전국 단위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상당수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소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생태·환경 등 주제를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최신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등 이전 중국 학자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동북 지역 개발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던 고구려·발해유적 발굴 조사의 결과보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고조선사부여사 논문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가야·백제·신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고려·조선 시대 연구가 눈에 띄는 만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중심의 한중관계사 연구가 심

화되고 있으며, 고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한중관계를 모두 종번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역사·문화 언어·예술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면, 한국 역대 왕조들의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부각시키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민족과 역사를 집대성한 대규모 출판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주목해야한다. 동북지역 고대 종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2014년에 『중국동북민족사』 상·중·하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고대 중국 동북지역의 종족집단을 크게 동호계와 숙신계로 구분하고, 부여와 고구려의 종족적 근간을 이루었던 예맥족을 동호계와 숙신계의 상호융합의 산물이라고 보는 신설을 제기했다. 2015년에는 『길림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7권이 출간되었다. 이 해에 『부여역사연구문헌회편』 6권도 출판했다. 중국학계에서는 부여사가 자국의 지방역사라는 관점을 시종일관 견지해오고 있다.

2016~2017년에는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가 출간되었다. 2016년 3월에 『부여역사편년』, 『고구려역사편년』, 『백제역사편년』, 2017년 3월에 『발해역사편년』과 『거란역사편년』이 출간되었다. 총5권의 편년총서는 부여·고구려·백제·발해·거란 관련 한중일의 사료를 집성한 다음, 연대기로 정리한 사료집이다. 편년의 기준은 중국사서로 중원왕조의 연호에 따라 각종 사서의 사료를 발췌하여 나열했다. 중국사서, 묘지를 비롯한 금석문,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사서,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사서를 총망라했다.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료이용의 폭이 전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주편인 장웨이공은 서문에 동북공정의 경험으로 이 총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각 권 표지에는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항목 성과라고 명기해 놓았다. 최근 동북지역 분야 국가 연구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중국이 이 지역 역사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북지역 역사서 출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9년 12월에 발간된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다. 2010년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의 중대항목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집필진은 대부분 동북공정의 주역이거나 과제를 수행한 인물들이다.²⁾ 마다정과 리성은 고문으로 참여했다. 지린성사회과학원, 지린대학, 동북사범대 소속 연구자들이 집필진의 주축이다. 동북지역사를 총 집대성한 이 총서는 중국 역사정책의 틀 안에서 정리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동북사 인식을 보여준다. 총서는 총론과 고구려사가 빠진 채 출간되었다. 가장 관심사안인 고구려사가 미출판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중 구두양해 조항과 한국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한 때문인지, 원고의 완성도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총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고구려사 역시 조만간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서에서는 요동지역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주체적,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권, 혹은 민족정권으로 규정했다. 이 총서는 만주 지역에서 명멸한 여러 나라 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성과와 문헌자료, 고고자료를 모두 모아 종합 정리함으로써, 이 지역이 자고이래 중국 영토였고, 이

2) 각권의 집필은 『箕氏朝鮮史』, 『卫氏朝鮮史』는 苗威, 『孤竹·东胡·令支·屠何史』는 李德山·李路, 『夫餘史』는 劉信君·邓树平, 『前燕史』는 赵红梅, 『后燕史』는 田立坤, 『北燕史』는 尚永琪, 『渤海史』는 魏国忠·杨雨舒, 『契丹史』는 武玉环, 『东丹史』는 都兴智, 『金史』는 程妮娜, 『东夏史』는 蒋秀松·蒋戎, 『北元史』는 栾凡, 『后金史』는 黄松筠이 맡았다.

지역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입증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참여자나 프로젝트 시작 시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총서는 동북공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총서의 각권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 관련 자료들과 연구성과를 취사선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다원일체의 중화대가정을 강조하면서 동북지역의 이른바 방국과 속국들의 중심이 한족이고, 지역문화는 선진 한족 문화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는, 한족(漢族) 우위의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새로 형성된 전선, 문화원조 논쟁

최근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문화원조 논란이 그것이다. 이는 한중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혐증, 혐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국굴기와 G2 진입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에 비판적인 모든 대상들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이며 여론을 조성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원조 논쟁도 모두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네티즌들의 지나친 반응을 어느 정도 관리했던 동북공정으로 인한 논란 때와 달리 갈등과 논란을 가라앉히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론의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정책방향과 맥락이 닿아있다.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화문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현창하고,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중국적 표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경제·생태 등 주요 영역에서 문명대국을 지향하여 종합 문명대국을 건설하고자 한다.³⁾ 중국인들이 자국의 역사·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애국심으로 발현하여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승화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⁴⁾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두 개의 100년 분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명문화함으로써 중국 민족주의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문화발전 전략으로, 후진타오 시대의 3개 자신감, 즉 중국적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에 더해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찬란한 전통 문화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해 온 혁명 문화의 융합, 전통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를 결합한 가치관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화민족공동체론이 새로운 민족이론으로 주창되고 있다.⁵⁾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옛날부터 한족과 소수민족이 일체였으며 내부통합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3) 「中国特色社会主义的基本精神」, 『中国青年报』, 2022.6.14.

4) 「加强新时代爱国主义教育阵地建设」, 『人民日报』, 2022.6.7.

5) 「进一步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 『环球时报』 2022.7.11.

중국사에서 한족과 이종족 왕조의 분열과 화합은 중화민족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한족이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문화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중화민족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애국주의 경향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이니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했다는 전언이 잘못된 소문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진핑의 기본적인 역사인식이라면 지금이 동북공정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가주도의 정치이념 교육의 강화, 역사연구 강화와 박물관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 실현, 역사 대중화 등도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다.

4. 해야할 일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 시기의 주장들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구려사를 넘어 고조선, 부여, 신라, 백제, 고려, 조선사에 대해서도 자국 중심의 자의적인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사 연구심화, 신진연구자 양성, 국내외에 올바른 한국사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 등 그동안 계속해왔던 노력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첫째, 한국사 전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사대계, 한국통사, 한국사개설서를 많이 편찬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의 정의를 정립한 위에서 한국사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종합, 정리해야한다. 한국사의 시공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한다.

둘째, 한국사에 맞는 역사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한국사 시기구분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이후, 서양의 기성품 이론을 가져와 이리저리 적용해본 것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사에 딱 맞으면서 세계도 인정하는 역사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거의 없었다. 전근대 시기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과 용어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동북3성의 역사도, 만주 역사도 아닌 북방의 역사를 한국사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역사는 당연히 연구를 더 심화해야한다. 여기에 부여, 북옥저,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을 비롯하여 조선족 역사와 그 지역의 현대사까지 모두 한국사적 시각에서 살피고, 백두산을 포함한 지역의 지리, 문화, 생태환경 등에 대한 연구해야 한다. 거란, 여진, 몽골, 청에 대해서도 그 역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사대화기구로서 한·중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또 동아시아사 공동연구, 한·중 공동 역사서 편찬, 공동역사교재 제작, 공동역사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예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시기 안에 쉽게 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고 계속 제안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다. 한중 역사 갈등이 다른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중 역사화해를 위한 인적교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중국 각 지역의 대학 및 기관과 상시적인 학술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한·중 양국 청소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양국 유학생들을 매개로 두 나라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혐오 정서를 줄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사 연구물의 제3국어로의 번역, 번역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등 역사화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역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끝으로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원래 개념대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안에 적용하지 말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한중간 역사·문화를 둘러싼 갈등은 동북공정의 차원을 넘어섰다. 동북공정은 원래 고대부터 미래까지 포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사·발해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북 3성 지역에 한정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중국과의 역사 문제는 시간, 주제, 분야, 지역 면에서 훨씬 확산되었는데, 아직도 동북공정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패권주의적 역사관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는데, 같은 용어로 규탄을 계속하면 확장된 검토대상의 일부분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의 검토대상은 이미 동북공정이란 단지를 빠져나가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사족이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자의적인 역사만들기, 신중화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단지 끝난 프로젝트 이름을 계속 사용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姜維公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 上·中·下卷, 長春:吉林文史出版社.
- 姜維東 主編, 2016~2017, 『東北古代民族歷史編年叢書』, 北京:科學出版社.
- 戴逸 總主編, 2018~2019, 『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叢書』,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馬克·劉信君 總主編, 2015, 『吉林歷史與文化研究叢書』, 長春:吉林人民出版社.

논문

-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 권순홍, 2022, 「최근 중국학계 고구려사 연구(2018~2021)의 몇 가지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77.
- 馬云超, 2021, 「“己亥東征”與15世紀前期的東亞外交博弈-以朝鮮王朝初期的對外政策爲中心」, 『江海學刊』 2021-05.
- 拜根興, 2021, 「唐朝與新羅道教文化交流的再探索」, 『唐史論叢』 2021-02.
- 徐丹, 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以游擊將軍許國威爲中心」, 『當代韓國』 2021-02.
- 孫文政, 2021, 「金與高麗宗藩關係演變的歷史學考察」, 『東疆學刊』 2021-03.
- 張子昂, 2021, 「朝鮮王朝後期水軍中的“戚法”運用情況」, 『西部學刊』 2021-12.
- 蔡藝·趙劍平·張銀行, 2021, 「中國武術古籍東傳與朝鮮漢文武籍的編纂」, 『體育學研究』 2021-04.
- 沈一民, 2021, 「現存文獻所見大欽茂時期渤海國大唐使次數考」, 『中國邊疆學』 2021-01.
- 向勇, 2021, 「明清租貢體制下的文化交流與實物往來」,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21-05.

기타

- 동북아역사재단, 2022, 『중국의 역사정책과 동북아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